



김동진 편집장



전세계 고병원성 A발생에 따른 변화

계란 수출 확대 기반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3월 9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에서 A가 발생한 이후 현재(3월 23일)까지 더 이상의 A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외국에 비해 산란계 농가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살처분 범위 축소로 3백만수 정도의 살처분에 그쳐 계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47개 주에서 총 5천800만수의 가금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본은 총 80개 농가에서 1천580만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미국의 경우 12월 한때 계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이상 급등하여 다스(12개)당 511달러(개당 약 511원)까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개당 200원이 넘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계란사용을 중단하는 식당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부족 사태가 장기화되자 외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바이어들이 손짓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초 국내 계란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여 스페인으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수입을 강행했지만 정작 국내 계란이 남아 가격이 낮게 형성될 때는 관심이 없어 농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도 국내 계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양계농협 등 업체들은 그동안 간간히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해 왔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하고 수출을 원하는 업체나 수입국 등을 발굴하여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국가간의 수출입 검역체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계란수출이 국내 계란 과잉으로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축산자조금 활성화에 관심을

정부, 자조금 길들이기 이제 그만

2002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
률(자조금법)이 도입되면서 축산업계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었다. 2004년 양돈
을 시작으로 축산업계가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양계분야도 2009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 50%의 보조가 이루어지다 보니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축산물 홍보, 교육, 수급조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물의 소비확대 및 축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자조금의 몸집이 커지다 보니 정부의 지원은 교육, 수급조절 등에만 한정하고 홍보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정부 승인도 늦어지면서 농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년도 이미 1분기가 지나고 있지만 승인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우선사업승인을 이용하면 된다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물론 거출율 저조와 납부농가들의 비협조,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검토가 늦어진다고는 하지만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축산자조금이 지난해에도 5월에 승인이 났으며, 계란자조금은 승인조차 내 주지 않아 개점 휴업을 하기도 했다.

모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사업계획(편성)안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고 농식품부는 12월 31일까지 편성안을 심의하고 자조금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원안 또는 수정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납부를 거부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없어 의무자조금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계란과 닭고기 자조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란의 경우 거출방법이 노계도계장에서 농가 규모별로 산정하여 거출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닭고기는 농가와 계열사들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 적극적인 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닭고기는 많은 농가와 업체들의 노력에 의해 지난해 4년만에 거출이 시작되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거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 승인을 통해 자조금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농가에서는 납부에 예외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양계**